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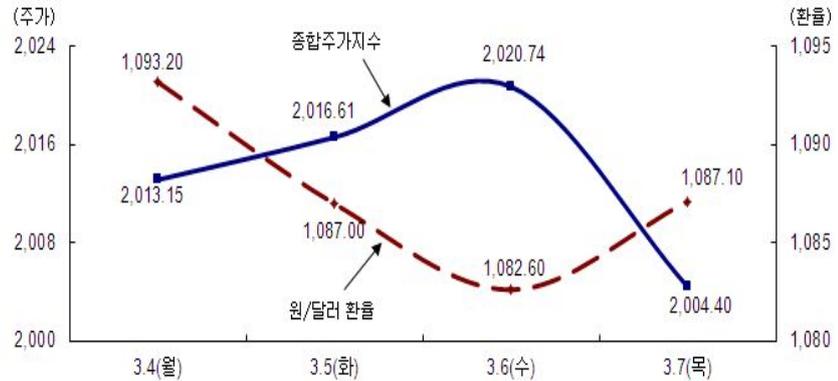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저소득 자영업자 대책 시급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4~3.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저소득 자영업자 대책 시급

#### ■ 저소득층 가계부채 심각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떤 집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연체가구 비중이 얼마나 되며 대출 증가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중소득층으로 끌어올리는 가계부채 대책을 제언코자 하였다.

####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①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평균 월가처분소득(72.8만원)이 월원리금상환액(73.9만원)보다 적어 채무상환비율이 101.4%에 달하여, 중소득가구의 24.1%, 고소득가구의 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7,229만원으로 연가처분소득 836만원의 8.3배에 달해 중소득가구의 1.4배, 고소득가구의 1.1배보다 심각하다. 평균 2억 1,661만원의 자산이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이고, 저축액(주식채권포함)은 1,994만원에 불과하여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연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②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은 57.7만원으로 월원리금 145.1만원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251.4%로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47.7%, 임시일용직가구의 66.2%, 무직가구의 66.9%보다 훨씬 높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934만원으로 연가처분소득 693만원보다 24배 이상 많아,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3.3배, 임시일용직가구의 2.7배, 무직가구의 6.0배보다 매우 심각하다. 자영업가구는 평균 4억 2,974만원의 자산이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사업자산이고, 저축액은 3,965만원에 불과하여 실물자산 처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③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 연체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비연체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매우 취약하여 연체가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49.7만 가구(31.8%)에 달하며, 나머지 106.7만 가구(68.2%)는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연체경험 저소득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이 73.8만원에 불과하여 월원리금 78.2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연체 경험이 없는 저소득가

구의 경우에도 月원리금이 71.8만원에 달하고 月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 불과하여, 연체가구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④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수지가 열악하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156.4만 가구 중에서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23.4만 가구(78.9%)에 달해,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년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게 될 주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생활비(37.3%), 교육비(15.6%), 의료비(10.4%), 전월세보증금(5.5%) 등 생계형 대출이 주를 이루고,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도 19.2%에 달했다.

## ■ 시사점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필히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月가처분소득이 月원리금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해, 부채를 감면해 주더라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임금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와 경영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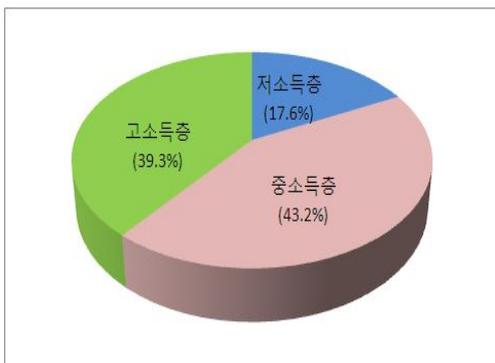
둘째,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 非연체가구의 경우 연체가구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 감면 대상을 한계에 다다른 장기연체자로 좁히고, 최근 연체하기 시작한 단기연체자는 수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권 자율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 및 단기연체자가 손실의 일부를 감수토록 하며, 재산 등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78.9%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큰 식료품과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I. 저소득층 가계부채 심각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101.4%에 달해 중소득층의 24.1%, 고소득층의 18.9%보다 매우 높은 수준
  -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827.4%에 달해 중소득층의 141.6%, 고소득층의 110.6%보다 매우 높은 수준
  -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이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자, 중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요소기도 함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sup>1)</sup>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주된 원인은 소득 감소(32.7%)와 부채 증가(17.6%)이며,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에 있어서도 과도한 부채가 11.4%를 차지
-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떤 집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연체가구 비중이 얼마나 되며 대출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중소득층으로 끌어올리는 가계부채 대책을 제언코자 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잔액 비중>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능력 >

	(%)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금융대출잔액 연가처분소득
저소득층	101.4	827.4
중소득층	24.1	141.6
고소득층	18.9	110.6
전체	23.8	146.8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1 :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저소득층, 50~150%미만이면 중 소득층, 150% 이상이면 고소득층으로 정의

주2 :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산출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2012.8.17)

## II.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 1. 정의 및 분석대상

○ (저소득층의 정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 )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OECD 및 한국 통계청 기준과 동일)

- 중소득층 :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 고소득층 :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

※가처분소득<sub>2</sub> = 경상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세금-공적연금보험-이자비용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분석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

○ (추계 결과)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 저소득층은 412.1만 가구이며, 그중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는 156.4만 가구(38.0%)임

-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및 부채 구조,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 < 저소득층 현황 >

(만 가구, %)

	금융대출가구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금융대출 없는 가구	
가구수	156.4	255.7	412.1
비중	(38.0)	(62.0)	(10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체 추산

2) 가계는 가처분소득으로 소비지출을 하고, 나머지로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 원금을 상환함.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적을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늘림

## 2.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 ①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

○ (채무상환능력 판단 지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라 유량 측면에서 '채무상환비율'을, 저량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잔액', '총자산 대비 총부채'를 사용

- 채무상환비율(DSR;  $\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 : 유량(flow)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 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 개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sup>3)</sup>은 '과다채무가구'로 정의

-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량(stock) 측면에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량 측면에서 실물자산 처분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 총자산 대비 총부채 : 저량 측면에서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 총자산 = 저축액(주식채권포함) + 전월세보증금 + 실물자산(부동산포함)
- 총부채 = 금융대출잔액 + 켓탄후 불입금액 + 임대보증금

○ (유량 측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아 채무상환이 매우 힘겨운 상황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月가처분소득은 72.8만원에 불과하여 月원리금상환액 73.9만원보다 적음 (채무상환비율 101.4%)

-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은 각각 24.1%, 18.9%로 상대적으로 양호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할 형편으로,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소득층으로 상승할 기회가 차단

-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 생계형 가계 대출 증가 → 원리금 부담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3) 한국은행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2012.4)

< 금융대출가구의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

(만원,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月가처분소득(A)	72.8	264.1	657.1	342.9
月원리금상환액(B)	73.9	63.6	124.0	81.5
채무상환비율(B/A)	101.4	24.1	18.9	23.8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 (저량 측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금융대출 규모가 매우 큼

-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7,228.9만원으로 年가처분소득 873.7만원의 827.4%에 달해,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 상환에 쓰더라도 8년 이상 소요
  - 중소득가구의 141.6%, 고소득가구의 110.6%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이 저축액(1,993.7만원)의 362.6%에 달해, 실물자산 처분 없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어려운 상황
  - 중소득가구의 113.1%, 고소득가구의 75.2%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총자산 대비 총부채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총부채는 8,508.4만원으로 총자산 2억 1,661.0만원의 39.3% 수준
  - 중소득층의 23.4%, 고소득층의 19.9%보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대출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대비 부채 >

(만원,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총자산	21,661.0	25,023.5	61,052.9	34,332.3
저축액	1,993.7	3,969.2	11,591.2	5,752.9
총부채	8,508.4	5,848.2	12,156.0	7,955.1
금융대출잔액	7,228.9	4,487.8	8,718.8	6,041.5
年가처분소득	873.7	3,168.9	7,885.1	4,115.0
금융대출잔액/年가처분소득(%)	827.4	141.6	110.6	146.8
금융대출잔액/저축액(%)	362.6	113.1	75.2	105.0
총부채/총자산(%)	39.3	23.4	19.9	23.2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 : 총자산 = 저축액(주식채권포함) +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 실물자산(부동산 포함)

총부채 = 금융대출잔액 + 갯탄후 불입금액 + 임대보증금

②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유량 측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비율이 임금근로자나 무직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156.4만 가구 중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는 42.8만 가구이고, 상용근로자는 28.0만 가구, 임시일용근로자는 41.6만 가구, 무직자는 44.0만 가구임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가구의 月가처분소득과 月원리금상환액은 각각 57.7만원과 145.1만원으로, 채무상환비율이 251.4%에 달해 대출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상용직 가구와 임시일용직가구, 무직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각각 47.7%, 66.2%, 66.9%로 자영업가구보다는 낮음
  - 하지만 채무상환비율이 40% 이상인 가구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함을 감안할 때 이들도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금융대출이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
  - 소득이 늘 적은 저소득층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액만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기에 용이
  - 금융대출이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에 나서면서 채무상환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됨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의 종사상지위별 채무상환비율 >

(만원, %)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저소득층
月가처분소득(A)	110.2	81.4	57.7	55.6	72.8
月원리금상환액(B)	52.5	53.8	145.1	37.2	73.9
채무상환비율(B/A)	47.7	66.2	251.4	66.9	101.4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 : 종사상지위는 가구주 기준

○ (저량 측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가구가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금융대출이 매우 많음

-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가구는 금융대출 잔액(1억 6,934.0만원)이 年가처분소득(692.6만원)의 24배를 초과하여,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가 거의 불가능
  - 저소득층 중 상용직가구와 임시일용직가구, 무직가구는 각각 3.25배, 2.68배, 6.04배임
-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가구의 저축액은 3,964.6만원으로 금융대출잔액 16,934.0만원보다 크게 적어,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처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
  - 금융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대출 잔액은 427.1%로 상용직가구의 247.7%, 임시일용직의 315.9%, 무직가구의 299.3%보다 높은 수준
- 총자산 대비 총부채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자의 총부채는 1억 9,347.6만원으로 총자산 4억 2,973.9만원의 45.0%에 달함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 상용직 가구와 임시일용직가구, 무직가구는 각각 31.6%, 38.2%, 30.8%임

< 금융대출 저소득층의 종사상지위별 소득·자산 대비 부채 >

(만원, %)

	상용직	임시·일용 직	자영업자	무직	전체
총자산	16,806.9	7,261.9	42,973.9	17,643.8	21,661.0
저축액	1,735.8	827.1	3,964.6	1,345.2	1,993.7
총부채	5,310.9	2,775.1	19,347.6	5,430.4	8,508.4
금융대출잔액	4,299.0	2,613.3	16,934.0	4,026.6	7,228.9
年가처분소득	1,322.6	976.3	692.6	666.9	873.7
금융대출잔액/年가처분소득(%)	325.1	267.7	2,444.9	603.8	827.4
금융대출잔액/저축액(%)	247.7	315.9	427.1	299.3	362.6
총부채/총자산(%)	31.6	38.2	45.0	30.8	39.3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③ 저소득층의 연체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非연체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매우 취약하여 연체가구가 더욱 증가할 우려

- 연체가구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 (납부기일 착오로 인한 연체는 제외)가 49.7만 가구(31.8%)에 달함
  - 나머지 106.7만 가구(68.2%)는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음
- 연체가구의 채무상환비율 : 저소득층 연체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이 106.0%에 이르러 채무불이행에 빠짐
  - 月가처분소득이 73.8만원에 불과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月원리금상환액이 78.2만원에 달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非연체가구의 채무상환비율 : 저소득층 非연체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99.3%로, 소득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우려 상존
  - 저소득층 非연체가구의 月가처분소득(72.3만원)이 月원리금상환액(71.8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 감면 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연체경험가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특단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
  - 하지만 저소득층 非연체가구는 가처분소득이 72.3만원에 불과하고 채무상환비율이 99.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 연체경험 유무별 특징 >

(만 원, %)

	연체경험 유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연체경험가구	연체경험 없는 가구	
月가처분소득(A)	73.8	72.3	72.8
月원리금상환액(B)	78.2	71.8	73.9
채무상환비율(B/A)	106.0	99.3	101.4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 : 연체경험가구는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로서, 납부기일 착오로 인한 연체는 제외

④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열악하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전망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대부분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는 못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156.4만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가 123.4만 가구(78.9%)에 달함
- **미래 부채 증가 요인** : 향후에도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이 증가할 전망
  -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53.9%)<sup>4)</sup>와 교육비(15.6%)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며 부채 상환을 위한 돌려막기식 대출도 19.2%를 차지
  - 중소득층도 생활비(35.7%)와 교육비(25.2%)를 위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하겠다는 응답이 42.9%에 달함

< 소득계층별 미래 금융대출 증가 요인 >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부동산구입	3.6	18.7	42.9	18.9
사업자금	6.8	10.5	12.2	9.9
생활비	53.9	35.7	20.5	37.7
교육비	15.6	25.2	14.1	21.0
부채상환	19.2	9.0	5.5	10.9
기타	0.8	1.0	4.7	1.6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1 : 미래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비중 산출  
 주2 : 생활비는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등 포함

4) 생활비 37.3%, 의료비 10.4%, 전월세보증금 5.5%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Ⅲ. 시사점

- 가계부채 때문에 저소득층이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 통로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중산층 복원을 위해 가계부채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
- 첫째,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필히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되어야 함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이 월원리금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해, 부채를 감면해 주더라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 44.0만 가구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무직 상태에 있음
    -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대폭 확충하여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저소득층 임금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직업능력을 향상
    - 임시일용근로자 중 44.4만 가구, 상용근로자 중 11.7만 가구는 임금이 적어 저소득층에 속하는 워킹푸어임
    - 직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
    -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임금 직종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대출이 상당한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저소득층에서 중소기업으로 상승할 기회도 차단될 수밖에 없음
  - 미소금융 등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되, 경영컨설팅 등 노하우 전수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사업장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 지식나눔을 통한 경영전문가를 확보하여 컨설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준비된 창업,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자영업 성공 여건 확보
  
- 둘째,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
  - 非연체가구의 경우 연체가구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
    - 향후에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될 경우,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우려 상존
  
  - 非연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고려
    - 부채 감면 대상을 한계에 다다른 장기연체자로 좁히고, 단기 연체자는 금융권 자율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통해 손실의 일부를 감수
    - 채무 감면 대상 선정 시 재산 등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 방안 마련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부채 감면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확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최근 연체를 시작한 단기연체자는 부채 감면 대상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

-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
  -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의 78.9%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 향후 1년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전월세보증금이 69.5%이고,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도 19.2%로 대부분을 차지
  -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필요
    - 공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큰 식료품, 공공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 가구별 금융·복지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중소득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저소득층의 자산·부채 구조 및 소득·지출 구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재산 형성 지원
    -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가구에 대해서는 파산 및 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치·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1.9	6.0	-1.0	-3.8	-0.4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28일	3월 7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88	2.00	0.12%p
	엔/달러	77.66	79.37	85.86	92.28	93.95	1.67¥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136	1.2979	-0.0157\$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054	14,329	275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1,559	11,968	40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63	2.66	0.03%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83.0	1,087.1	4.1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26.5	2,004.4	-22.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28일	3월 7일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1.93	91.56	-0.37\$
	Dubai	104.89	92.89	107.99	106.76	106.21	-0.55\$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2.95	292.73	-0.2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